

당정 “방산·K컬처 신성장산업 육성… 주식 장기투자 유도”

경제성장전략회의…반도체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철강 재편 추진
물가 안정·RE100 산단 지원 등 요청…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선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도 정부에 주문했다. 상품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으로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 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당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등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지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위해 ‘폐기특구 특별법’으로 정부를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무조달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을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선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김경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나왔다.

협의회에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별도의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투자 방안 등을 당정이 논의했다며 “자금이 제대로 시장에 조달되도록, 종잣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호응하도록 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정부가)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국가전략산업에 추가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성장펀드의 투자 분야가 “SMR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우원식 의장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 가능… 더이상 미뤄선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며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론하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국민투표법이 10년 이상 효력정지 상태로 표류하고 있지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부끄럽다”며 “6월 지방선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가운데)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 잘못된 수단…국민께 사과”

국힘 대표, 1년만에 첫 사과…민주 “철 지난 사과 국민 받아들일지 의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의원 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한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시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 “철 지난 사과에 대해 국민이 진심이라고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능수산식 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장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비록 썩은 사과일지라도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시당, 광주·전남 통합 공개 지지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해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안태우)은 7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주·전남 통합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태우 광주시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6년 병오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이재명 정권을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국민의힘이 해로 만들기 위해 당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주·전남 통합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통합 도지사로 나선다면 주요 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서 청년혁명·일자리혁명·선거혁명으로 상장되는 ‘3대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청년”이라며 “AI, 반도체 후공정, 이차전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청년이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이 사리진 선거는 지역 발전을 기로막아 왔다”며 정치 구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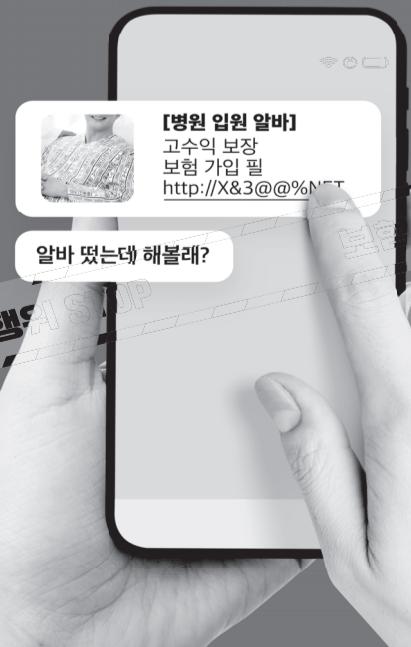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안태우 광주시당위원장과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해 광주시당 주요 당직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